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뜨는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4. 4.(목) 13:00부터
(4.5. 조간)

배포

4. 4.(목) 09:00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4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 지방시대 4+10 이행과제 중점 추진 -

- 부처간 칸막이 제거하여 계획-예산 연계 강화 -

- ①첨단산업·지방투자의 핵심 거점, 기회발전 특구 지정 개시
- ②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도입으로 지역주도 교육혁신 본격 추진
- ③지방도심 복합개발하여 인재·기업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본격화
- ④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24.12월)
- ⑤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초광역권 활성화로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
- ⑥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책임성 강화로 자치분권 기반 마련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4일 국비 24.6조원을 포함해 총 42.2조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 위원 명단 별첨)

위원회는 올해 초 각 시·도를 돌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며 주민참여형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2023년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을 작성하여 제3차 지방시대위원회(2023.11.23.)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지침 설명회’를 개최(2023.12.13.)하여 작성 방식을 각 수립 주체들에게 상세히 안내하였다.

시·도 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 시·도 지사와 협의·조정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시한(2024.2.15.) 내에 지방시대위원회로 시행계획을 제출하였다. 특히,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되었다.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특징

❶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였다.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시행계획에 적극 담아내고,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한 달간 각 시·도를 방문해 시·도와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지방시대 시민/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각 시·도의 시행계획 작성방향을 소개하고, 패널토론 형식으로 시민/도민과 시·도 지방시대위원/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다.

- ② (지역정책과제/분권시행계획/초광역권계획 첫 포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그리고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Bottom-up) 계획이다. 그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와 초광역 협력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 ③ (총 42.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2조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0조원(35.6%), 민자 2.6조원(6.1%)으로 구성된다.

*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제출한 2024년 예산사업 내역을 기반으로, 정합성 검토(시도-부처에 동일사업 중복계상 여부 등)를 거쳐 산정
- ‘국비’는 부처에서 제출한 일반회계+지특회계+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기준으로 집계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략Ⅳ(특화발전)와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전략Ⅴ(생활복지)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 ④ (지방시대위 4+10 중점 이행과제)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와 함께 금년도에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종합계획 상의 분권 과제(‘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등 3개 과제로 충실히 담고자 하였다. 기존 정책과제(현장 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의 경우, 종합계획 발표 이후의 추진 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모두발언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우 위원장은 “각 부처는 예산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제 개선사항도 일정애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방시대위원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최대한 넓혀 지방시대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보았듯이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4대 특구를 상호 연계·이행하고, 지방정부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 참석 지방시대위원(26명)

- * 위촉위원 : 우동기(위원장), 김형태, 김혜경, 모종린, 박기관, 박성진, 박주희, 박형준, 우수한, 윤세리, 이미연, 이 영, 이은미, 추현호
- * 당연직위원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발전특구 도입과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문화특구와 로컬콘텐츠로
지역활력 강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지방경제 역동성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초광역권 활성화
본격 추진으로
지방경쟁력 제고

개성있는 특화발전 위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

현장 규제 해소로
지방기업 활력 제고 및 투자 확대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인구 유입 확대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로
재정책임성 제고

자치역량 제고를 통한
지방분권 기반 구축

‘중점 이행과제’ 핵심내용

(4대 특구)

- ①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투자기업 주도의 계획에 따라 ‘24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등 세부방안 마련 추진
* 대구·부산·전남·경북 등 총 4개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신청 접수(‘24.3월)
- ② (교육발전특구 도입)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역의 규제 개선 위한 법안 마련
* 1차 31건 지정(‘24.2월 광역지자체 6, 기초지자체 43), 2차 지정(‘24.7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법안 마련(‘24.下)
- ③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융합특구를 관계부처 특구사업 등과 결합하여 공간적으로 중첩 적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지원
* 도심융합특구 지정·운영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시행(‘24.4), 범부처 업무협약(‘24.上)
- ④ (문화특구와 로컬콘텐츠) 지역 문화창조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24.12월)하고,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 100’을 집중 홍보하며, 新유형의 지역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활성화 추진

(10대 중점 이행과제)

- 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세컨드홈 활성화를 지원하고,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중점 추진
- ②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이양사무 발굴과 체계적인 지방이양 사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자치 시도 특례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발전방안 제도화 추진

- ③ (초광역권 활성화)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협력 거버넌스 구축·확산 및 초광역권 발전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 초광역권 활성화 본격 추진
 - * 초광역권 협력사업 실행력 제고방안 마련(~'24.6월), 초광역구축 특별위원회 구성·운영('24.3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유도 등 초광역권 거버넌스 구축지원 및 규제개선 과제 추진('24.7월~)
- ④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을 위해 지방시대 종합·시행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과제 추진을 위해 반기별 이행점검 및 현장방문 등도 본격화
- ⑤ (현장규제 해소) 지방기업 활력 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본격 조성하고, 불합리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및 지자체별 숙원과제 발굴·개선 추진
 - * 부산·강원·충북·전남 4곳 특구 지정('24.4, 특구위), 특구 후보지 신규 선정('24.下)
- ⑥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지역별 첨단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 규제·애로 해소 등을 포함한 첨단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2024.3),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 발전전략인 '지역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 지원
- ⑦ (디지털 재창조)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지역 2개를 추가 선정하여 '디지털 혁신지구'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24년 5천개 중소기업의 DX전환 지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확충을 이행하는 한편, SW중심대학 17개를 신규 선정하여 디지털 인재 집중 양성
- ⑧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체계적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정책 지속 추진 및 주거·돌봄·일자리 복합형 지역 활력타운 조성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확대
- ⑨ (지방재정 건전성·안정성 강화)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및 경제상황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성이 낮은 지방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추진 및 지방이양사업(80개)의 책임있는 사업관리 강화
- ⑩ (자치역량 제고) 지방재정부담 사업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를 통한 책임성 확보, 지방정부의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분권의 기반 구축에 기여

4대 특구 관련과제

1.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추진 목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을 실현할 핵심 특구인 기회발전특구가 대구·부산·전남·경북을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최초로 지정된다. 지방정부가 기업의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지방투자의 요람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신청하면, 정부는 신속한 검토 및 지정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특구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 추진 계획

① (제도 완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를 과감히 도입한다. 특별법을 통해 지방기업 인력양성 지원, 기회발전 특구 지원 및 특구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신규 지정) 지방정부와 투자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지역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구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고시, 2024.3월)을 제정한 바 있다. 대구·부산·전남·경북에서 2024년 3월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였는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규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투자기업 유치 등 특구 지정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는 언제든지 수시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 세제·재정·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금년 2월까지 국세·지방세 감면 혜택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기회발전특구펀드 등 금융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①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②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③지방이전 창업 또는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④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등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2. 교육발전특구 도입으로 지역주도 교육혁신 본격 추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한다.

□ 추진 경과

- 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2023. 12. 6.
- ②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2023. 12. 11. ~ 2024. 2. 9.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 가능

- 운영기간: 3년

*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 결정

- ③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31건(광역 6, 기초 43) 선정·발표: 2024. 2. 28.

유형	신청단위	신청현황	지정(안)	지자체명
1 유형	기초 지자체	29건 (30개 기초지자체)	20건 (21개 기초지자체)	- (인천) 강화 -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 (강원) 춘천, 화천, 원주 -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 (충남) 서산 -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 (전남) 광양
2 유형	광역 지자체	6건 (6개 광역지자체 전지역)	6건 (6개 광역지자체 전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 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 충남 (아산) - 경북 (안동-예천) -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 전남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 교육발전특구 중점 추진 내용 및 우수 사례

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완성형 온종일 통합 돌봄체계 구축, 유보통합의 안정적 체계 구축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또는 영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②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역 연계 자율형 공립고 2.0을 운영하여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IB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 기반 디지털화를 고도화하여 에듀테크를 연계한 창의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한국 적응 지원, 글로벌 인재 교육, 이중언어 교육과정, 교환학습제도, 다문화가족 갈등위기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③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초·중·고에 선도적으로 투입하여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 공교육의 중심이 되는 고교-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내실화한다. 고교-대학-취업연계를 통해 지역인재의 양성-취업-정주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인재선발* 확대를 통한 고교-대학-지역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지방의대 지역인재선발 법정 비율은 40%(강원·제주 20%)이나 대학 자율로 60% 이상 확대 추진

④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대학-지역특화산업의 연계를 통한 우수 산업인재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유학생 Non-Stop 지원체계’를 통한 지역산업 인재 육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계에 취업 예정인 해외유학생의 지역 장기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비자의 취업비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K-드림 비자지원센터 운영(경북)

* 외국인거점지원센터 및 거점형 외국인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전남)

□ 향후 계획

① (1차 지정)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세부 운영계획 수립: 2024. 3월 ~ 5월
-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재정 및 규제 개선 지원: 2024. 5월~

② (2차 지정)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공모: 2024. 5월 ~ 6월
-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평가 및 지정: 2024. 7월~

3.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 추진 목표

기존 지역개발 사업들이 주로 도시 외곽에 추진되어 정주여건 개선에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상업·문화시설 부족이 지적되었다면,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4월에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법이 시행되면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의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추진 계획

① (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관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4월에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임시허가 실증·특례, 교육·주택·의료 특례 등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인을 요청 받은 후에는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또한, 도심융합특구에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융합 기술의 개발·실증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지난해 선도사업 지역별로 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산업 등 핵심 기술을 선정하였으며, 2026년까지 R&D 사업에 국비 2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② (범정부 협업 지원) 도심융합특구를 디지털혁신지구(과기부) 등과 중첩 적용토록 노력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지원하는 범부처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4.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로컬콘텐츠로 지역활력 강화

□ 추진 배경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로컬100’은 지역의 대표적인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홍보하여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로컬창업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원·문화특성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및 로컬브랜드를 육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지역산업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추진 방안

① (문화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13곳)는 예비사업을 추진(2024.1~12월)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2024.12월)할 계획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 당 3년간(2025~2027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② (로컬100) 2023년 10월에 지역문화 명소(58개), 지역문화 콘텐츠(40개), 지역문화 명인(2명)을 ‘로컬100’으로 선정하였으며, 2년간(2023~2024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함으로써 지역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③ (로컬창업 및 로컬브랜드)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청년의 창업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화·협업을 지원하였고, 2023년 로컬브랜드 창출 4개팀을 발굴·지원하였으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대책(2023.5월)에 따라 2024년에는 로컬크리에이터 및 로컬브랜드 200개사(팀)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10대 중점 이행과제

1.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지방경제 역동성 강화

□ 추진 목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첫째, 세컨드 홈 활성화로 생활인구 확대, 둘째,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방문인구 확대, 셋째, 외국인 유입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이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방문인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 계획

① (세컨드 홈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세컨드 홈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도시민이 지방에 생활거점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하고, 귀농·귀촌 수요를 놓어준 인구 유입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적용지역·주택가액 등 세부요건 검토 후 관련 법령을 2024년 하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② (관광인프라 조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 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지정·승인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그간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 대규모일 경우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었으나, 지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에 융자조건을 우대하는 등 금융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③ (외국인 유입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를 확대 실시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우수인재 또는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체류자격 특례를 부여하여 발급하는 비자이다. 2024년에는 시행지역과 배정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융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 추진 목표

지방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이양사무를 발굴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 모델을 확립하고, 이양 사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추진 계획

① (체감형 이양사무 발굴) 주민편의 증진·절차간소화·지역균형발전 등에 필요한 이양과제를 상시 발굴하여 지방정부의 체감도를 향상하고, 특행 기관(중기·고용·환경)과 지방정부 간 유사 중복기능을 정비하여 행정 비효율성 해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특례시의 규모·역량에 맞는 신규 특례 발굴 및 특례부여 의결 사무 중 미법제화 사무에 대한 입법화 등을 통해 특례시에 자치 권한을 대폭 부여할 예정이다.

② (지방이양 사무관리체계 구축) 국가 총사무 및 이양사무 DB 구축과 이양사무 평가 근거 마련 및 평가지표 개발, 지방이양사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방이양 완료 사무의 효과 분석을 통한 환류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③ (특별자치시·도 분권모델 제도화) 「강원특별법」(’24.6.8.), 「전북특별법」(’24.12.27.) 시행 예정에 따라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발전전략 수립에 적합한 시행령 제정을 지원함으로써, 특별자치시·도의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구현과 특색있는 맞춤형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초광역권 활성화 본격 추진으로 지방경쟁력 제고

□ 추진 목표

지방주도의 초광역권 발전과 지난해 수립된 4+3 초광역권 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에 반영된 산업·문화·SOC 분야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초광역권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확산하는 한편,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추진 계획

① (초광역권 협력사업) 초광역권 시행계획에 포함된 산업·문화·SOC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초광역 지자체별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실질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6월까지 초광역권 사업의 실행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점검과 워크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첨단바이오 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광역 관광개발, 광역 철도·도로망 구축 등

② (초광역권별 협력 거버넌스) 그간 부울경, 충청권에서 진행해온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초광역권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초광역권 권역별 거버넌스 방안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표준모델·기본규약안 등을 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다.

③ (초광역권 활성화 제도 개선) 초광역권 발전 활성화를 위해 중앙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지방 초광역권 구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과 중앙,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관계자와 상시 소통함으로써 초광역권 발전이 속도감 있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4. 개성있는 특화발전 위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

□ 추진 목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하여 발표(2022.4)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이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정책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한편,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위원회·부처·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등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 계획

① (계획 및 예산 연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과제 중 2024년 예산 반영 등으로 적극추진 중인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24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종합계획 반영과제 중에서 2025년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를 시·도에서 제출받아 관계부처 협의 후 기재부에 송부하여 예산반영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② (점검회의 및 모니터링) 예타 탈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지역정책과제 전문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內)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과제 등 중장기 추진 중인 과제는 관련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③ (반기별 이행점검) 지역정책과제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역정책과제 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등과 함께 반기별로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④ (부처합동 현장점검)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현장중심 행정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지방시대 현장同行 프로젝트’)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5. 현장 규제 해소로 지방기업 활력 제고 및 투자 확대

□ 추진 목표

지역 기반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4년에는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을 지정하고, 특구 후보지 3곳을 신규 선정한다. 또한, 기업투자 및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및 지자체별 숙원 핵심과제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 추진 계획

① (글로벌 혁신특구)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4곳*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24년 하반기에는 특구 후보지 3곳을 추가 선정하여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를 적용한 지역 기반의 첨단산업을 지속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

② (산단 제도혁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23.8월)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를 전년비 2배 수준으로('23년 958억원 → '24년 1,86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복합용지, 토지용도 전환 규제 완화 등 민간투자 제도를 정비하여 주거·편의시설 조성 투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근로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전국 노후산단 대상으로 청년복합문화센터 30개소, 아름다운 거리 28개소, 노후공장 리뉴얼 150개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지역 숙원규제 해결) 지역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행안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숙원 핵심과제를 50건 이내로 선정하고, 과제 분석 및 대안 마련 등 해결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선정된 핵심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규제 개선권고 등 신속히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에 대한 전문적 검토·조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 규제 자문기구로 설치·운영 중

6.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 추진 목표

지역별 첨단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2024.3월) 마련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주력산업 육성 품목의 연차별 기술 로드맵을 수립한다.(2024.上) 아울러,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발전전략인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2024.6월)하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 추진 계획

① (첨단전략산업 거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 첨단 생태계 구축, 개별 특화단지 경쟁력 제고 방안 등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2024.3월)하였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한다. 지방 주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개발도 추진(2024년 1,257억원)한다.

②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자체 및 테크노파크,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가전략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전용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한다(‘25년~’30년, 1.5조원 규모). 또한, 주력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주도로 기획한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레전드 50+’*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24년 2,790억원).

* 레전드 50+ 사업: ‘21년 46.8%인 중소기업 매출 비중을 ‘27년까지 50% 이상 달성 지원

③ (지방 과학기술 혁신) 지역 주도로 각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지역별로 집중 육성할 중점기술 분야를 설정하여 지역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계획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핵심 신규사업의 예산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이 국가전략기술의 혁신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역특화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 모델로서 강소특구 2단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7.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 추진 목표

정부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지방 디지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자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만의 특색있는 디지털 성장전략을 지원하고자 한다.

□ 추진 계획

①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디지털 기업·인재의 집적을 통해 지역 신산업 허브로 성장할 디지털 혁신지구 시범추진 지역을 5월에 2개 추가 선정한다.

* 既 선정 시범 추진지역(3개 지역) : 부산 센텀, 대구 수성, 광주 AI융합단지

현재, 既 선정 지역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최적화된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예타사업 사전 기획 등 컨설팅을 지원 중이며, 신규 추가 선정되는 지역은 26년까지 3년간 인프라 기반 조성,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초기 활성화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② (지방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현장수요 기반의 스마트공장·로봇 보급 및 기업 디지털전환(DX) 지원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조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제조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수준에 맞춰 2024년에 5천여개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확산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지역 거점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4개 지정, 2027년까지 지속 확대)

③ (디지털 인재 양성) SW중심대학 17개 신규 선정(2024.3월, 925억원 지원)을 통해 지방 산업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SW전문·융합 인재를 양성(2027년까지 100개 선정 예정)한다.

* 누적 성과 : '24년까지 58개 대학 선정, '23년까지 28만 7천명 양성

또한, 24년 338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활용한 현장 실무형 SW·AI인재 5,800여명을 양성하는 등 지방기업 수요와 연계한 현장형 고속련 디지털 핵심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북권, 동남권 등 5개 거점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

8.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인구 유입 확대

□ 추진 배경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4개가 농어촌 지역이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주거시설과 각종 산업시설의 혼재 등 개별적·무계획적으로 난개발됨에 따라 도시민의 인구 유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어촌신활력증진을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지방이주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인구(생활인구)를 늘려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추진 계획

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공간계획법을 본격 시행한다. 농촌공간계획 기본방침을 마련('24년 상반기)하고, 중앙-지방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활력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대상지 35개소를 공모하고, '23년 선정된 65개 지역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 농어업인 육성)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사업'등 종합적 지원)과 농어업분야 취·창업을 지원하여 '27년까지 청년농어업인 32천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공급을 확대('23년 8,577억원 → '24년 12,413억원)하고 영농정착 지원도 확대('23년 4천명 → '24년 5천명)한다. 청년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선 임대를 확대('23년 10척 → '24년 25척)하고, 양식장 임대 시범사업(10개소)도 추진한다.

③ (지역활력타운 추진) 지방 이주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하여 주민 정착을 지원한다. 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을 확대(10개 → 18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 사전 선정절차를 폐지하는 등 공모 절차를 개선한다.

9.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로 재정책임성 제고

□ 추진 목표

책임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재정의 대응력을 향상하며, 효율성이 낮은 지방공기업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 계획

① (지방재정 건전 운영) 현행 지방정부 단위 평가에서 기금별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기금 관리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의무화 및 사용가능비율을 상향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하는 등,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조정,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②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재무건전화) 2026년까지 총 49개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2022년~2023년 32개 기관 통·폐합 완료)하여 효율성이 낮은 공공기관은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위험단계별 선제적 부채관리*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형별 평가지표를 통해 부채중점 관리기관 지정(1차), 재무위험 수준이 높은 기관은 부채 감축 대상기관 지정(2차)으로 단계별 관리 추진

③ (지방이양사업 관리 강화) 재정분권으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에서 국정과제와 주민의 안전·민생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적정 투자 관리로 필수 기능 공백을 방지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이양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실시(~2026년), 지방이양사업 종합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2026년~)할 계획이다.

10. 자치역량 제고를 통한 지방분권 기반 구축

□ 추진 목표

지방분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지방정부 소관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의정활동 공개지표를 확대하여 의회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자율적 조직 운영에 따른 책임성도 확보하여 지방분권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 계획

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재정부담 사업(시설 설치·운영, 보조금 사업, 기금, 포상금 등) 정비과제를 발굴(~'24.上)하여,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요건·절차 등을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입법적 개선을 통해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② (지방의회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주민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업무포털을 구축('24.3분기~)하고 의정자료시스템 구축(~'25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정활동 공개 지표를 현행 5개에서 8개 항목*으로 확대('24년~)하여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계획이다.

* 내고장알리미
(lais.go.kr)

현행 (5)	지방의회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민원 처리현황, 의정비	⇨	확대 (8)	현행 5개 지표 + 업무추진비, 의원정책연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	---	---	------------------	--

③ (지방정부 조직관리 역량 제고) 지역주민·언론 등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조직관련 공개정보를 확대하고 통합공표 방식 등 공개 방법을 개선('24.3분기)하여 조직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정부별 정밀 조직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여 조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 (총괄)	책임자	과 장	고상미	(044-251-3105)
		담당자	사무관	박이용	(044-251-3152)
		담당자	전문관	하정석	(044-251-3108)
	지역정책지원과 (지역정책과제)	책임자	과장	이종찬	(044-251-3121)
		담당자	사무관	조민정	(044-251-3122)
	과학산업정책과 (기회발전특구, 첨단전략산업, 디지털재창조)	책임자	과장	강은구	(044-251-3126)
		담당자	사무관	김태완	(044-251-3127)
		담당자	사무관	김창연	(044-251-3139)
	지역교육혁신과 (교육발전특구)	책임자	과 장	김주연	(044-251-3133)
		담당자	사무관	윤현아	(044-251-3134)
	규제벤처혁신과 (현장규제 해소)	책임자	과 장	최태용	(044-251-3141)
		담당자	사무관	손정아	(044-251-3142)
	분권정책과 (인구감소지역, 자치역량)	책임자	과 장	허영지	(044-251-3145)
		담당자	사무관	이수영	(044-251-3178)
	권한이양조정과 (권한이양, 지방재정)	책임자	과 장	신기동	(044-251-3153)
		담당자	사무관	김은미	(044-251-3154)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 (초광역권활성화)	책임자	과장	김태권	(044-251-3158)
		담당자	서기관	이성일	(044-251-3115)
	지역공간정책과 (도심융합특구)	책임자	과 장	김경은	(044-251-3165)
		담당자	서기관	김귀현	(044-251-3185)
	지방문화복지과 (문화특구)	담당자	서기관	허범무	(044-251-3171)
		담당자	사무관	정혜영	(044-251-3172)
	농어촌활력과 (매력있는농어촌)	책임자	과장	곽기형	(044-251-3173)
담당자		사무관	권영진	(044-251-3174)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안순헌	(044-215-4570)	
	담당자	사무관	황철환	(044-215-457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책임자	과 장	남호성	(044-205-3301)	
	담당자	사무관	김동혁	(044-205-3307)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410)	
	담당자	사무관	박정민	(044-203-4419)	



[참고 1]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핵심 내용

[참고 2]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요약

[참고 3]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요약

[별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참고 1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핵심 내용

1. 2024년 재정투입 계획

□ 2024년 총 재정투입 계획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따른 재정투입은 총 42.2조원으로 국비 24.6조원(58.3%), 지방비 15.0조원(35.6%), 민자 2.6조원(6.1%)으로 구성
- 전년 대비 총 투자액 15.6%('23년 36.5조원→'24년 42.2조원), 국비 40.6%('23년 17.5조원→'24년 24.6조원) 증가
- * 지방비 : ('23)16.1조원→('24)15.0조원(6.8%↓) / 민자 : ('23)2.9조원→('24)2.6조원(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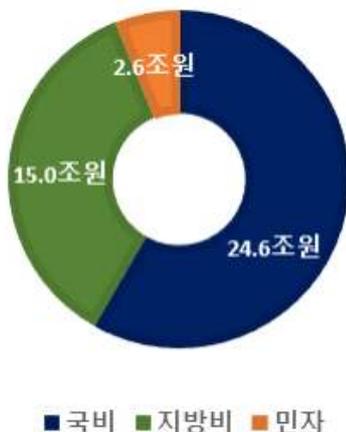
□ 5대 전략별 투입 규모

- 시·도, 중앙부처 모두 전략 IV(특화발전)과 전략 V(생활복지)에 중점
- * ▲전략 I(지방분권)/전략II(교육개혁)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수반하지 않는 제도 및 규제개선 과제에 초점, ▲전략IV(특화발전)은 시·도별 지역정책과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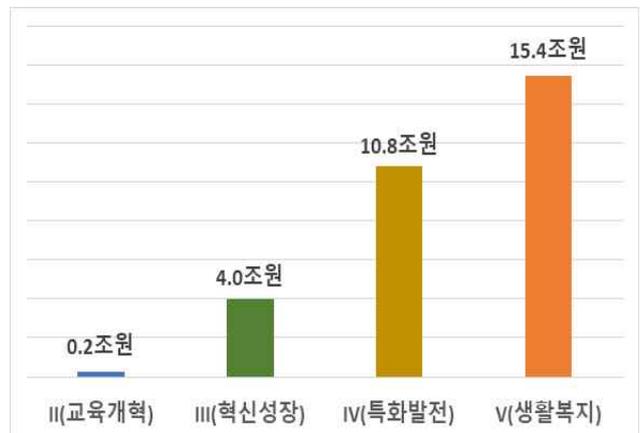
- ▶ 전략 IV 주요 과제 : 분야별 지역정책과제(산업, 과학기술, 문화관광, 환경복지, 국토, 해양, 자치분권, 농림수산 등), 지역특화 문화관광, 교통물류 인프라 등
- ▶ 전략 V 주요 과제 :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지역 환경·생태자원 보전·활용

- 중앙부처는 5대 전략별로 전략 I(지방분권) 0.1%, 전략II(교육개혁) 0.8%, 전략III(혁신성장) 13.2%, 전략IV(특화발전) 35.4%, 전략V(생활복지) 50.5% 비중으로 투입 계획
- 시·도는 5대 전략별로 전략 I(지방분권) 11%, 전략II(교육개혁) 6%, 전략III(혁신성장) 16%, 전략IV(특화발전) 33%, 전략V(생활복지) 34% 비중으로 투입 계획

【 전체 재원 구성 】



【 부문별 계획 5대 전략별 재정투입 】



2. 2024년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행계획 (5대 전략별 핵심과제·실천과제)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68개 실천과제			
			과제명	사업수 (개)	'24 국비 (억원)	부처
I.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I-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행안부	(1) 지방정부 행정권한 확대	3	-	행안부
			(2)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1	-	행안부
			(3) 자치입법권 강화	2	-	행안부 법제처
	I-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행안부 기재부	(1)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강화	2	-	행안부 기재부
			(2)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2	-	기재부 행안부
			(3) 지자체 간 재정균형장치 강화	3	-	행안부
	I-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행안부	(1) 지방정부 역량 강화	2	16	행안부
			(2) 지방의회 역량 강화	2	-	행안부
			(3) 주민참여 증진	3	135	행안부
	I-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행안부	(1) 자치경찰 이원화	1	-	행안부 경찰청
			(2) 특별자치시도의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구현	1	-	행안부
			(3)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맞춤형 기능수행모델 개발	2	-	행안부
	I-5. 지방의 책임성 확보	행안부	(1) 지방정부 감사 기능 강화	1	-	행안부
			(2)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3	-	행안부
			(3)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3	-	행안부
	합계			15개 실천과제	31개	151억원
II.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II-1.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	(1)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을 통한 지역 공교육 발전	2	-	교육부
			(2)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수도권·지방의 교육격차 해소	2	106	교육부
			(3)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대학 육성	1	-	교육부
	II-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교육부 중기부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1	-	교육부
			(2) 대학 규제 개혁을 통한 자율적 발전 지원	2	53	교육부
			(3) 지역혁신 및 지역창업 허브로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	5	2,145	중기부 교육부
	II-3. 지방 자치-교육 자치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 행안부	(1) 시도-교육청 행정 및 교육재정 연계·협력 강화	2	-	교육부 행안부
			(2)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1	-	교육부
			(3) 지역-학교 협업의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1	-	교육부
			(4)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1	-	교육부
합계			10개 실천과제	18개	2,304억원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68개 실천과제			
			과제명	사업수 (개)	'24 국비 (억원)	부처
III.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III-1.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 거점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	산업부	(1)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지방투자 활성화	9	5,843	산업부
			(2) 지역별 첨단산업 육성거점 신설	9	331	산업부
			(3) 지역 성장거점 고도화	6	941	산업부
	III-2.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국토부	(1) 지방 광역도시 융합 거점 개발	4	290	국토부
			(2) 강소지역의 자생력 강화 지원	5	1,595	국토부
	III-3.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산업부 고용부	(1) 지역 전략산업 발굴 및 혁신기반 확충	13	6,617	산업부 중기부
			(2) 지역 특화형 고용창출 촉진	3	1,575	고용부
	III-4. 글로벌 선도형 지역 과학 기술 진흥	과기부	(1) 글로벌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역량 확충	10	2,571	과기부
			(2) 지방과학기술 성과확산 및 사업화 촉진	6	1,808	과기부
			(3) 지역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	1	28	과기부
	III-5.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과기부 산업부 행안부	(1)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7	1,175	과기부 산업부
			(2)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보급·확산	8	1,334	과기부 산업부
			(3)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발굴 확산	1	29	행안부
	III-6.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중기부	(1) 지역 창업·벤처투자 기반 구축	4	1,609	중기부
			(2) 지역중소중견기업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8	821	중기부 산업부
			(3) 데이터 기반의 지역중소기업 제조혁신 촉진	2	2,062	중기부
			(4) 지역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2	249	중기부
	합계		17개 실천과제	98개	28,878억원	
IV.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IV-1.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산업부 중기부	(1) 산업 분야 지역정책과제	24	739	산업부
			(2) 과학기술 분야 지역정책과제	11	326	과기부
			(3) 로컬콘텐츠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재생	4	128	중기부
	IV-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문체부 해수부	(1) 문화·관광 분야 지역정책과제	9	300	문체부
			(2) 환경·복지 분야 지역정책과제	13	593	환경부 복지부
			(3)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문화관광 육성	19	4,223	문체부
			(4) 지역 연안자원 기반 특화형 해양관광 육성 지원	3	417	해수부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68개 실천과제				
			과제명	사업수 (개)	'24 국비 (억원)	부처	
	IV-3.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국토부 해수부	(1) 국토 분야 지역정책과제	34	12,980	국토부	
			(2) 해양 분야 지역정책과제	11	6,873	해수부	
			(3) 자치분권 등 분야 지역정책과제	7	622	행안부	
			(4) 지역특화형 교통·물류 인프라 지원 및 구축	27	54,923	국토부 해수부	
	IV-4.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해수부	(1) 농림수산 분야 지역정책과제	5	89	농식품부 해수부	
			(2) 농촌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	20	4,914	농식품부	
			(3) 해양수산 지역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	5	1,280	해수부	
	합계		14개 실천과제	192개	88,407억원		
	V.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V-1.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 개선	14	32,540	행안부
				(2) 취약지역 자립 역량 강화 지원	4	2,831	행안부
(3) 농촌형 서비스 강화, 정주환경 개선으로 농촌 소멸위기 극복 지원				8	9,620	농식품부	
(4) 어촌 진입장벽 완화, 복지환경 개선으로 어촌 소멸위기 대응 지원				6	1,170	해수부	
V-2.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국토부	(1)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고도화	3	1,640	국토부	
			(2)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4	2,844	국토부	
			(3) 활력있는 새만금 도시조성 기반 마련	1	-	국토부	
V-3.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복지부 행안부	(1)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15	14,220	복지부	
			(2)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개선	4	1,009	복지부	
			(3) 안전한 지역사회·건강한 가족 만들기	13	21,538	행안부 여가부	
V-4. 지역 환경·생태 자원의 보전 및 활용		환경부 산림청	(1) 친환경·탄소중립기반 구축	15	37,293	환경부 산업부 산림청	
			(2) 지역 생태복원 및 지역환경 보전·활용	10	1,792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합계		12개 실천과제	97개	126,497억원			
총계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68개 실천과제	436개	24.6조원		

3.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개관 (추진 목표 및 전략)

※ 17개 시·도가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서울	목표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추진 ◆ 권역별 특색있는 균형발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문화·관광 매력 콘텐츠 육성 및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
부산	목표	시민들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기반 구축 ◆ 금융집적 및 첨단 디지털 금융·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조성 ◆ '인재-취업-정주'를 연계한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기반 조성
대구	목표	신공항 건설과 남부 거대경제권 기반 마련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신산업 중심 특성화 대학 육성 및 인재양성 ◆ 5대 미래신산업 혁신성장거점 조성 및 기획발전특구 지정 ◆ 글로벌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도시건설 본격추진
인천	목표	시민 중심의 도시경쟁력 있는 미래가치 기반 구축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중심의 자치기반 마련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 세계를 선도하고 지역가치를 확산하는 경쟁력 있는 특화도시 기반 구축
광주	목표	더 (살기·즐기기·기업하기) 좋은 기회도시 광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주도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기회도시 실현 ◆ 기술기반 창업생태계 강화와 혁신 미래산업 지원을 통한 미래도시 도약 ◆ 청년이 머무는 도시, 더 따뜻하고 더 두터운 돌봄도시 광주
대전	목표	미래개척·문화활력·생활안정·공간혁신의 일류경제도시 대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창의·도전 생태계 구축 ◆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 혁신을 통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 다양한 관광콘텐츠 강화로 대전의 다채로운 매력 증진
울산	목표	일자리 넘치는 지방시대 선도도시 울산 만들기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 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반구대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 지역 맞춤형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와 환경·생태자원 보전
세종	목표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법적 기반 마련 ◆ 양자기술 등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조적 혁신도시 조성 ◆ 한글, 금강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발전 도시 육성

경기	목표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고, 누구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터전 창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견인 ◆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으로 더 고른 기회제공 ◆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센터 및 통합추진단 운영
강원	목표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선도 지역특화 미래산업 육성 ◆ 5대 관광벨트 조성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 미래선도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충북	목표	중부내륙시대 개막과 대한민국의 중심 우뚝 충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100년 먹거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충북 경제성장 발판 마련 ◆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 노력을 통한 중부권 거점 공항 도약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 1위 자리매김
충남	목표	대한민국 성장과 나눔을 선도하는 힘센 충남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성장 동력확보 및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을 통한 풍요로운 삶터 조성 ◆ 도민의 품격있는 삶의 질 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확보
전북	목표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특별자치 실현 ◆ 누구나 살기 좋은 더 특별한 전북을 위한 재정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과 특화발전으로 도민 복지 향상
전남	목표	최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성장 기반 및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구축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첨단 전략산업(이차전지, 바이오, 데이터 등) 허브로 도약, 미래 먹거리 확보 ◆ 세계 속의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으로 글로벌 전남 실현 ◆ 두텁고 촘촘한 복지 정책 추진으로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 건설
경북	목표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 수립·시행, 민간주도 경제성장과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차등분권 추진으로 정책성과 제고 및 지역경쟁력 강화 ◆ K-U시티+ 프로젝트 추진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로 지역인재 육성 기반 강화 ◆ 민간투자-대학·기업 연계로 지역주도 핵심 전략기술 발굴 및 첨단산업 선점
경남	목표	도민과 함께여는 희망! 새 경남시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 ◆ 남해안 관광 활성화 등 다시 찾고 싶은 경남 관광 환경 조성 ◆ 전략적 투자 유치,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재도약
제주	목표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 ◆ 혁신성장, 청정산업, 특화발전으로 어디서나 잘사는 제주

4. 2024년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개관 (추진 목표 및 전략)

※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충청권	목표	바이오·모빌리티 등 혁신자원을 연계한 미래 新성장동력 확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초광역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 ◆ 혁신거점 클러스터 확장 및 광역생활경제권 조성을 위한 교통망 연결 ◆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 강화
광주전남권	목표	광주·전남 초광역권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초광역권 에너지산업 육성 ◆ 첨단 바이오산업에 기반한 의료헬스케어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인프라 구축 ◆ 공간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및 혁신산업 간 유기적 연결 네트워크 구축
대구경북권	목표	대구경북 산업 대전환과 신공항 연계 강화로 지방시대 선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500만 경제공동체 기반 대구경북 산업구조 대전환 선도 ◆ (협력) 지역 간 역사문화 콘텐츠의 상호활용 신공항·신항만 연계로 세계로 열린 대구경북 실현 ◆ (제도)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지역 간 발전 기반 마련
부울경	목표	주력·신산업 혁신기반 마련 및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부울경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 및 신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 ◆ 시·도민 여가생활 및 건강권 향상(광역관광개발 국비 138억원 확보)
전북권	목표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통한 바이오융복합 산업 거점화 ◆ 특수목적용 모빌리티 기반구축 및 탄소복합소재 다변화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동서내륙 SOC
강원권	목표	미래산업 선도, 초광역협력 생태계 중심지 도약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산업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초광역경제권 구축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융복합 관광허브 구축 ◆ 순환경제 혁신을 위한 교통망 확대·거점간 네트워크 강화
제주권	목표	초광역 생태계 조성으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구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생물자원 활용 초광역협력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시장 확산 ◆ 데이터 기반 SW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

참고 2

「사·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요약 (사·도 작성)

서울특별시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

□ 2024년 추진전략

- ◆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추진(권한이양, 자치조직권 자율화 등 건의(5건))
- ◆ 권역별 특색있는 균형발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사업체수(1~4인제외, 171천개))
- ◆ 문화관광 매력 콘텐츠 육성 및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외국인 관광객수(2천만명))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지속 추진 ▪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등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마련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미래 행정수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및 창의행정 추진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취약계층 대상,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서울시내 우수 대학자원 활용, 청년 창업인재 양성하는 캠퍼스타운 운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혁신 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 5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산업육성으로 혁신성장 거점 마련 ▪ (지역별 과학기술 진흥 및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미디어(상암)·R&D(마곡)·바이오(홍릉)·ICT 첨단산업(강동) 등 거점 마련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서울 뷰티트래블 워크·사계절 대표축제 개최 등 관광·문화 콘텐츠 강화 및 '그레이트 한강' 추진으로 수변문화거점 조성 및 다양한 한강 관광자원 육성 ▪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서울시내 지역간 교통접근성 격차 해소,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고령화 대응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노인복지시설 등 지속적 확대 ▪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 (지역 환경생태 자원의 보전 및 활용) '정원도시 서울' 구현을 통한 시민 휴식 공간 제공 : 서울 초록길 구축 등

□ 2024년 추진전략

-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기반 구축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 ◆ 금융집적 및 첨단 디지털 금융·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조성 (창업펀드 조성, 11,411억 원)
- ◆ ‘인재-취업-정주’를 연계한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기반 조성 (청년고용률 42.3%)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국가경영 과감한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부산의 도약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발전 기반 마련 ▪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시정성과 창출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주민자치역량 및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 체계 강화로 도시 회복탄력성 향상 ▪ (지방의 책임성 확보) 전문성 강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구현
인재가 넘쳐나는 담대한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글로벌대학 선정을 통한 지역 공교육 발전 및 부산시 교육개혁 추진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온 부산’이 ‘온종일’ ‘온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교육정책 실현
일자리가 풍부한 창조적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 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금융기회발전특구 성공적 지정을 통한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및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타운 조성, 에코델타 첨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혁신 스타트업 성장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성숙한 도시 인프라 기반 주도적 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한국 산업은행 이전을 통한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 기반 마련 및 국제금융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금융집적지 조성 ▪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및 접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핵심기반 구축, 부산항 북항 1단계~2단계 사업 신속 추진으로 글로벌 해양·항만 허브도시 기반 구축,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및 도시공간 혁신으로 도시균형발전 실현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삶의 품격있는 맞춤형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세대·계층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강화,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응급처치 15분 도시 구현,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시립 아동병원설립, 가족센터 건립·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가족기능 강화 ▪ (지역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친환경 탄소중립기반 구축으로 맑은 물·공기·자원 선순환의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 추진

□ 2024년 추진전략

- ◆ 미래신산업 중심 특성화 대학 육성 및 인재양성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학생(1,500명))
- ◆ 5대 미래신산업 혁신성장거점 조성 및 기획발전특구 지정 (앵커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16건))
- ◆ 글로벌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도시건설 본격추진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기반 마련) 지방이양 과제 발굴 및 추진체계 마련 ▪ (자치역량 제고)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타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연계·협력 추진 ▪ (책임성 확보) 재정 건전화 강력 추진, 자체 감사기능 강화, 의회 정보공개 활성화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 글로벌대학 지정 추진 ▪ (대학-지역 동반성장) RISE 체계 구축, LINC3.0 및 RIS 사업을 통한 인재양성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발전특구) 기획발전특구 지정, 미래신산업 분야 투자유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 ▪ (효율적 성장공간) 도심융합특구,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재생 ▪ (산업 및 일자리)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의료기술연구동, 제약스마트팩토리플랫폼 ▪ (지역과학기술진흥)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 수질관리 기반 물산업 육성, 국립대구과학관 ▪ (디지털혁신) 대구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SW융합클러스터 2.0, 대구 AI의료생태계 구축 ▪ (창업 및 혁신생태계)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ABB 성장펀드, 빅데이터산업 생태계 구축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적 창조역량)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자율주행 모빌리티 복합단지, 그린섬유소재산업 ▪ (문화·관광 육성) 경상감영/달성토성 복원, 대구문화예술허브 조성, 금호강 르네상스 ▪ (핵심인프라 확충) 대구경북신공항, 후적지 개발(New-K2),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 (농산어촌)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이전), 도시농업 육성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마을기업 육성 ▪ (지역 생활여건 개선) 대구한의대 혁신융합캠퍼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 (의료·보건·복지) 공공/응급의료 기능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 (환경·생태) 친환경·탄소중립 기반 구축, 도시숲 조성, 조림, 신천 정비 및 관리

□ 2024년 추진전략

- ◆ 시민 중심의 자치기반 마련 (열린시장실 참여자수 : 26,210명)
-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공보육 이용률 : 41.2%)
- ◆ 세계를 선도하고 지역가치를 확산하는 경쟁력 있는 특화도시 기반 구축 (주요관광지 방문객수 : 4249천명)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인천고등법원 유치, 적극행정 및 규제 발굴 운영 확대 ▪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시정혁신단 구성·운영, 의정아카데미 운영, 온라인 열린시장실 운영 ▪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자치경찰제 정책 토론회,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 (지방의 책임성 확보) 시민감사관 제도, 의정활동 정보공개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인천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시민교수 육성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 미래인재 양성 활성화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신혼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외국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스마트산업단지 추진,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 ▪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K-바이오 랩허브 시설 건립,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블록체인 허브도시 및 AI Playground 조성 ▪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기술기반 창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미래 모빌리티 기술혁신 지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화도진축제 활성화,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스타트업 지원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인천 귀어학교,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확대, 인천의료원 시설 확충,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예방강화 ▪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시내버스 전기 및 수소차로 교체, 도시숲 조성

□ 2024년 추진전략

- ◆ 시민이 주도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기회도시 실현 (시민광장 광주ON·월요대화·정책소풍 운영)
- ◆ 기술기반 창업생태계 강화와 혁신 미래산업 지원을 통한 미래도시 도약 (창업기업 특화펀드 3,759억원)
- ◆ 청년이 머무는 도시, 더 따뜻하고 더 두터운 돌봄도시 광주 (광주다움 통합돌봄지원 6천명)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광주시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주도 정책기획) 시민 아이디어 정책화 '시민광장 광주ON', 시민 정책참여단 운영 ▪ (시민·현장중심 소통 강화) 시장 주재 시민과의 소통 창구 '월요대화', '정책소풍' 운영 ▪ (마을공동체 역량 결집) 온라인 플랫폼 '마을e척척', '광주마을학교', '광주마을교육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광주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인재양성) 지·산·학 협력기반 광주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체계 구축'을 위한 RISE 센터 구축 ▪ (함께하는 광주형 늘봄학교) 학교 內 늘봄학교, 온·오프마을 다·돌봄터, 거점형 늘봄학교
창업생태계와 기술 집적단지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경제활성화 및 투자촉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에너지 특화기업 육성 ▪ (AI거점도시 광주) AI영재고 설립,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준공 및 AI실증도시 구현 ▪ (호남 최대 창업단지 조성)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5천억 펀드 조성
미래혁신 핵심거점 도시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렘도시 광주) 영산강 Y-프로젝트 추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복합쇼핑몰 연계 15분 도시 조성 ▪ (미래차 삼각벨트 구축)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 (국토서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나주 광역철도 추진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형 돌봄도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확충 ▪ (아이키우기 좋은 광주) 광주형 출산·보육 정책 패키지 아이키움 ALL IN 광주 7400+, 일가정 양립지원 중소기업장 초등학생 부모 10시 출근제 확대

□ 2024년 추진전략

- ◆ 창업 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창의·도전 생태계 구축 (스타트업파크 입주공간, 30실)
- ◆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 혁신을 통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대전RISE센터 개소)
- ◆ 다양한 관광콘텐츠 강화로 대전의 다채로운 매력 증진 (0시축제, 200만명 방문)
- ◆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맞춤형 공공복지인프라 확충 (대전형 청년주택, 824호 준공)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분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자치조직권 강화 및 조직 자율성 확대, 전문적인 입법정책활동 추진 강화 ▪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자주재원확충 및 세입기반 강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방공무원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교육희망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주도 교육혁신, 글로벌대학 30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늘봄학교, 사립유치원 전 연령 무상교육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비즈니스융합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덕구청사 부지 활용 혁신공간 조성 ▪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과학기술 실증 상용화 ▪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 기업성장주기별 3-UP 지원
참여와 연대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스마트그린 혁신산단 조성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0시 축제, 시 대표축제 육성, 국제회의산업 ▪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공정한 기회 제공의 균형발전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전형 빈집정비 녹색인프라 조성 ▪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대전역세권 재정 비축진사업 ▪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 2024년 추진전략

-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지원기업수(100개))
- ◆ 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반구대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24년 목표(착공) 대비 공정률 (100%))
- ◆ 지역 맞춤형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와 환경·생태자원 보전 (무공해차보급대수(1,700대))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 및 책임성 제고, 적극조례 발굴·선정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활성화 ▪ (지방의 책임성 확보) 지방정부 감사기능 강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발전특구 도입,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대학 육성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유보통합 추진, 늘봄학교 운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경제자유구역 확장, 기회발전특구 지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도심융합특구 추진,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창업생태계 기반구축,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R&D)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설치, 국립 도심항공교통진흥원 설립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관광거점도시 육성 ▪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개설, 혼잡도로 개선 (제2명춘교 건설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발달장애인 거점센터 조성),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노후 회야정수장 정수처리 시설개선) ▪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공기관 추가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 2024년 추진전략

- ◆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법적 기반 마련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 마련)
- ◆ 양자기술 등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조적 혁신도시 조성 (일자리수 215천명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88개)
- ◆ 한글, 금강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발전 도시 육성 (관광객수 2,200천명)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활성화 ▪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특별자치시의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구현(세종시법 전부 개정(안) 마련)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조성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 사이버보안 기회발전특구 육성 ▪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시티, 드론 실증도시, 미래모빌리티 등 세종형 혁신산업 육성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양자기술창업 허브공간 퀀텀빌리지 조성)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한글문화 확산·교류 기반 마련(한글문화도시 육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및 연계 축제·행사(세종 빛 축제, 낙화 축제 등과 연계) ▪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월정액권(이응패스) 도입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읍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미래마을 조성(빈집정비 등) ▪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지원 ▪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형 놀이터 조성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공공보육서비스 강화 및 안심하고 양육하는 환경 조성

□ 2024년 추진전략

-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견인 (도민 공론화 토론회 등 개최(21회))
- ◆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으로 더 고른 기회제공 (참여자만족도(80%))
- ◆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센터 및 통합추진단 운영 (테스트베드조성(조성))
- ◆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및 친환경차 전환 가속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89,000기))
- ◆ 도민·기업 체감형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100MW))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p>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도민 발안제 활성화 ▪ (지역맞춤형 자치모델개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p>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시행,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 대학 확대
<p>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 검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 ▪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경기국제공항 유치 여건 조성 ▪ (지역특성화형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p>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경기문화창조허브 동부권역센터 운영 ▪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 ▪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어촌 조성)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p>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소멸 위기대응 지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강화 ▪ (지역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전 분야 탄소 중립(RE100) 달성

□ 2024년 추진전략

- ◆ 지역경제 선도 지역특화 미래산업 육성 (1인당 GRDP 3,670만원, 일자리 80만개)
- ◆ 5대 관광벨트 조성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관광객수 1,640만명)
- ◆ 미래선도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글로벌대학 2개교, 교육발전특구 3개)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강원특별 자치도 특례 발굴을 통한 자치분권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 활성화 ▪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강원특별법 특례발굴 추진, 특별자치시도(강원제주세종전북)간 협력 강화
미래선도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어디서나 수준높은 교육기회 제공)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대학 육성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공동사업 활성화, 늘봄학교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산업벨트 특화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정, 디지털헬스케어 메카 육성 ▪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수월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흥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5대 관광벨트 조성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삼척 액화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소형 화물차 특화 e-모빌리티 산업 육성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춘천호수권 호수관광도시벨트 조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속 추진) ▪ (지역 특성화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적기 완공, GTXB 노선 춘천 연장
지방시대를 선도 하는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 ▪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생활여건 개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활력타운 ▪ (지역 환경·생태 자원의 보전 및 활용) 강원특별자치도형 국가정원 조성, 목재산업 육성

□ 2024년 추진전략

- ◆ 미래 100년 먹거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충북 경제성장 발판 마련 (투자유치실적 47.9조원)
- ◆ 청주국제공항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중부권 거점 공항 도약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380만명)
-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 1위 자리매김 (출산육아수당 지급인원 확대 : 7452명)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충북형 자치경찰제 추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 국제학교 설립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지역혁신중심 RISE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늘봄학교 운영,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추진, 투자유치기반조성, 국가산업단지 조성(오송 제3생명과학, 충주 바이오헬스 등) ▪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국가양자기술 전문연구원 설립 ▪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지역연고산업육성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AI 바이오 영재고,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조성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실현, 도립 대표도서관 건립 ▪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충북선 철도 고속화 조기 추진,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귀농귀촌 유치지원, 지역특화 스마트팜 지원
삶의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충북형 도시농부, 지역균형발전 4단계 사업 추진 ▪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충북형 출산육아수당 지원, 의료비 후불제 지원 ▪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 미호강 맑은물사업 추진

□ 2024년 추진전략

- ◆ 미래성장 동력확보 및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수(79천명))
- ◆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을 통한 풍요로운 삶터 조성
(1인당 농림어업 GRDP(16,956천원))
- ◆ 도민의 품격있는 삶의 질 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확보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율(53%))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강화 ▪ (지방의 자치역량제고) 시·군 정책협의체 운영, 지방의회 지원 및 의원역량강화 ▪ (지방의 책임성 확보) 지방정부 감사기능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어디서나 수준높은 교육기회제공)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충남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촉진)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반 구축, K-UAM 생태계조성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게임산업기업 육성 ▪ (지역주도의 경쟁력있는 농산어촌조성)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위기대응지원)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추진, 제2단계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생활여건 개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추진 ▪ (삶의질 높이는 지역의료·보건·복지 확충) 4대의료원 기능특화, 상업시설 등 연계 노인 일자리 창출

□ 2024년 추진전략

- ◆ 도민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특별자치 실현 (특례 발굴 30건)
- ◆ 누구나 살기 좋은 더 특별한 전북을 위한 재정력 강화 (재정자주도 2%p 향상)
- ◆ 지속가능한 성장과 특화발전으로 도민 복지 향상 (1인당 GRDP 4%p 성장)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p>자주, 자립, 자강의 특별자치 전북 (지방분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30건), 지역맞춤형 시군특례 발굴(10건), 강화된 자치조직권을 반영한 조직개편안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협업방안 마련 ▪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 치안 거버넌스 구축(세미나 1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 공감대 확산(간담회, 세미나 등 2회)
<p>인재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요람 전북 (교육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AI·디지털 기반 학생중심 전북미래학교 운영(전체 학교 중 30% 이상), 글로벌대학 공모·지정(2건) 등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및 참여 학생 취업률 향상(전년 대비 5%p 상향), 유보통합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
<p>일자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엔진 전북 (혁신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 등 성장 동력 확충) 전북특별자치도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새만금 이차전지 연구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 (글로벌 선도형 전북과학기술 진흥)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연구회 운영(10회), 연구기관-수요기관 공동개발 지원(3건)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
<p>도민과의 약속, 차별화된 특화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및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민자 유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추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보고서 준비 및 부처건의 등 ▪ (지역주도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p>활력 넘치는 사람 살기 좋은 전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 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시군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 및 세미나(2회), 이전공공기관 선점을 위한 유치추진단 운영(2회)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106,000건),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구축(1개소) 등

□ 2024년 추진전략

- ◆ 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바이오, 데이터 등) 허브로 도약, 미래 먹거리 확보
(1인당 GRDP 53.4백만 원, 일자리 104만 개(명) 달성)
- ◆ 세계 속의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으로 글로벌 전남 실현
(전남도 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6,255만 명 목표)
- ◆ 두텁고 촘촘한 복지 정책 추진으로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 건설
(응급의료시설 취약 인구 비율 33.0% 달성, 전년 대비 1.1%p ↓)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복지 안전 사각지대 발굴지원,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 등 ▪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자치경찰 이원화 특별법 개정 건의, 시군 현안 재정 건의 반영률 등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발전특구 추진, 그린스마트스쿨 환경 조성 등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 육성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늘봄학교, 마을돌봄센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 호남 청년리더 육성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기반 기회발전특구 조성 ▪ (최첨단 미래전략산업 육성)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및 앵커기업 유치, 규제자유특구 혁신산업 육성 등 ▪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도약)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구축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축산업 산업시설 스마트화) AI첨단농산업·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친환경 k-푸드 기반 및 수출 플랫폼 구축 ▪ (세계 속의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 남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선도,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등 ▪ (SOC 확충으로 미래발전 동력 확보)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 추진,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 활성화 등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에게 힘이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스마트기술 활용 돌봄서비스 지원 ▪ (삶의 질 높이는 지역의료·보건·복지 확충) 의료취약지 간호복지인력 확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추진 등 ▪ (지역 환경생태 자원의 보전 및 활용)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산림생태복원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사업 등

□ 2024년 추진전략

- ◆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차등분권 추진으로 정책성과 제고 및 지역경쟁력 강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운영 4회)
- ◆ K-U시티+ 프로젝트 추진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로 지역인재 육성 기반 강화
(지역국립대학 운영 활성화 성과 지수: 77%)
- ◆ 민간투자·대학·기업 연계로 지역주도 핵심 전략기술 발굴 및 첨단산업 선점
(SW분야 지역성장 관련 지원 기업 수: 15개)
- ◆ 글로벌 공항신도시 조성, 경북 특화형 라이프케어 관광 구축, 경북형 농업대전환 추진
(문화도시 조성 거점공간 수: 107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41,000,000명)
- ◆ 맞춤형 저출생 극복 인구전략 추진, 필수의료 보장으로 의료안전망 강화, 민간주도 경북형 재난대응 체계로 대전환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구축율: 80%)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시도 사무 중 시군구 위임사무 발굴 ▪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지방세 신세원 발굴 및 지방세입기반 확대, 지방세 조례 감면 활성화 ▪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추진 ▪ (지방의 책임성 확보)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발전특구 지정, 글로벌대학30 육성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구축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기업·대학·경북이 공동기획·추진 하는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구미 반도체, 포항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 육성 ▪ (지역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로 신성장 산업 생태계 구축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구축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먹고 놀고 자는 정주형 관광 조성 ▪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공항경제권 형성, 신공항 배후 스마트 도시 구축 ▪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경북형 농업대전환 추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 출범, 초청장학제도 및 광역비자제도 추진으로 해외인재 유치 ▪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 제공 및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디지털 안전망 확충

□ 2024년 추진전략

-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
(제조업 생산지수 107.9)
- ◆ 남해안 관광 활성화 등 다시 찾고 싶은 경남 관광 환경 조성 (관광객 수 2,800만명)
- ◆ 전략적 투자 유치,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재도약 (벤처펀드 조성액 2,200억원)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지역맞춤형 자치분권 컨설팅, 진주사천·산청 상생발전 업무협약 추진 ▪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추가 세수 확보 분야 발굴, 지특회계 개선 지원,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자체감사 실효성 확보 과제 발굴, 지방재정 투자심사 강화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경남형 교육발전특구 추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행복학교 3.0 운영, 미래교육지구 운영 활성화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 기회발전특구 조성,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초소형 위성개발,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임대형 스마트팜, 양식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월세 지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 (삶의 질 높이는 지역의료·보건·복지 확충)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건립 ▪ (지역 환경생태 자원의 보전 및 활용)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 2024년 추진전략

- ◆ 도민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 (재정규모 9.2조)
- ◆ 혁신성장, 청정산업, 특화발전으로 어디서나 잘사는 제주 (관광조 수입 65,400억 원)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p>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제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및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자치도세 감면 자율성 부여 ▪ (자치역량제고,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및 책임성 확보)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감사 기능강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등
<p>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교육개혁 제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발전특구, 글로벌대학 육성,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등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대비 일반-교육자치 통합성 제고(유보통합, 교권강화 등)
<p>혁신성장을 통해 소득이 증대되는 선진경제 제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기회발전특구,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 도시재생사업 ▪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촉진, 지역 맞춤형 창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역특화 사업육성,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 인증지원 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p>풍성한 자원과 문화가 빛나는 특화발전 제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해녀의전당 건립, 글로벌 위케이션 조성 등 ▪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지능형 물류체계 구축 - 제주물류지원 제도화, 청정 제주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p>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민행복 제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생활여건 개선) 15분 도시 제주 조성,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계 구축, 보건시스템 강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 (지역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도시 생명 숲 조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

참고 3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요약 (초광역권설정 지자체 작성)

충청권

바이오·모빌리티 등 혁신자원을 연계한 미래 新성장동력 확보

□ 2024년 추진전략

- ◆ 충청권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초광역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 (초광역 산업분야 실무 협의체 구성 2건)
- ◆ 혁신거점 클러스터 확장 및 광역생활경제권 조성을 위한 교통망 연결 (초광역 도로·철도 사업 추진 8건)
- ◆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 강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지원 1건)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핵심과제 추진계획
충청권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초광역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바이오 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 첨단 바이오 혁신 신약 클러스터 조성, 희귀 난치 질환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허브 구축 ▪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선도화 : 하이퍼전기사용차 신뢰성센터 기반 구축, 충청권 미래모빌리티 자동화 전환 지원 기반 구축
혁신거점 클러스터 확장 및 광역생활경제권 조성을 위한 교통망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 초광역 도로·철도 사업 추진(8건) 충청권 광역 대중교통체계 확대(광역간선급행버스, 자율주행 및 통합환승체계 등)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협력을 통한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 강화 :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지원, 충청권 금강수계 수생태 건강성 조사
초광역 협력을 위한 자치분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효율적 운영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특별법 제정 및 특례 발굴 ▪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적 조정 :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개선

□ 2024년 초광역 협력 계획

-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 운영
 - 이관사무의 단계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최초의 특별자치단체 출범.운영 등 공백없는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기반(재정지원, 특례법 제정 등) 마련 노력
 - 공동단장회의,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갈등요인 사전 차단 및 업무 지연 방지

□ 2024년 추진전략

- ◆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초광역권 에너지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건)
- ◆ 첨단 바이오산업에 기반한 의료헬스케어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인프라 구축 (의료헬스케어 산업 기반구축 확대 연구용역 추진율 90%)
- ◆ 공간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및 혁신산업 간 유기적 연결 네트워크 구축 (도로개설 공정률 77%)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핵심과제 추진계획
동북아 성장을 견인하는 초광역경제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에너지신산업의 동북아 메카 조성 : 배터리 기반 혁신 인프라 조성,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광주+전남 연계 에너지신산업 협력 확대,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활성화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 광주·전남 미래형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지역간 초고속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조성 등 초고속 자율주행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기술 연계 융합바이오 :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융합바이오 신산업 창출 및 고도화
초광역권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사람 중심의 생활공동체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전남 공유캠퍼스 조성 :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미래 신산업 인재 육성 ▪ 광주·전남 단일 경제권 확대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 경전선 전철화 건설,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건설 등 유기적 공간 연결 ▪ 광주·전남 문화·환경 국제화 사업 : 마한 역사문화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개방형 광역수장고보존센터 건립, 영산강 생태기능 제고 등 문화·환경자원의 가치 제고

□ 2024년 초광역 협력 계획

- ◆ 광주·전남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연계형 거버넌스 설치
- ◆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도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구성에 따른 환류체계 가동

□ 2024년 추진전략

- ◆ (산업) 500만 경제공동체 기반 대구경북 산업구조 대전환 선도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 추진률 100%)
- ◆ (협력) 지역 간 역사문화 콘텐츠의 상호활용, 신공항-신항만 연계로 세계로 열린 대구경북 실현 (웰니스 관광객 유치 33만명)
- ◆ (제도)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지역 간 발전 기반 마련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핵심과제 추진계획
(산업) 500만 경제공동체 기반 대구경북 산업구조 대전환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빌리티 모터 밸리 조성 :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 헴프 자원의 식의약 및 화장품 기능성 소재화 및 고부가 제품화 : 헴프 자원의 기능성 소재화 및 고부가 제품 개발·사업화를 위해 기능성 DB 구축, AI 기반 맞춤형 식품 개발 ▪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 사업 : AMR 기업지원 및 인프라 조성
(협력) 지역 간 역사문화 콘텐츠의 상호활용, 신공항-신항만 연계로 세계로 열린 대구경북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추진 : 치유·의료관광 자원 발굴, 치유·의료관광 기반 마련, 치유·의료관광 브랜드 구축(3대 전략 8개 사업) ▪ 광역교통 철도망 구축(구미~경산) :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개통(2024년 12월), 광역철도 운영협약 협의 및 체결
(제도)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지역 간 발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복단지 내 생산관련 규제 완화

□ 2024년 초광역 협력 계획

- ◆ 대구·경북은 2024년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협력적으로 추진 예정
 -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있어 대구·경북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
- ◆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통해 추진
 - 주요 기능 : 시·도 상생협력 비전·전략 및 각종 계획·정책 심의, 시·도 공동협력사업(어젠다) 심의, 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건의 등

□ 2024년 추진전략

- ◆ 주력산업 및 신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주력산업 1,050명 인재양성)
- ◆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 (광역교통망 37.3km 개통)
- ◆ 시·도민 여가생활 및 건강권 향상 (광역관광개발 국비 138억원 확보)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핵심과제 추진계획
<p>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혁신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성장 주도형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 핵심기술 확보 및 채용연계 인재양성 ▪ 부울경 산업 동반성장 지원 수소산업 육성 :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보급 촉진 ▪ 부울경 에너지동맹 추진 : 지역별 전기가격 결정체계 등 공동협력 ▪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확산 기반 및 통상 자원 기반 구축 : 인공지능 산업 육성
<p>생활권 확장 통행수요에 대응한 광역 인프라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 생활권 형성 및 산업지원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 광역망 상위계획 반영 건의 ▪ 부울경 단일경제권 확대를 위한 광역도로망 확대 : 거점도시 연결로 이동시간 단축 ▪ 가덕도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 : 필수 교통망 사업 신청 및 상위계획 공동 건의 ▪ 1시간 생활권 확보를 위한 광역대중교통망 운영 : 대중교통 광역환승 시스템 확충 ▪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거점 구축 : 특구 기본계획 및 지구 신청
<p>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울경 문화·관광의 경쟁력 강화 : 부울경 광역관광개발 추진 및 문화관광 수요 촉진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부울경 먹거리 확보 : 농산물 안전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 부울경 시·도민의 보편적 건강권 및 안전권 보장 : 공공보건의료 및 수질안전체계 구축

□ 2024년 초광역 협력 계획

-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 운영 및 역할 고도화 (인력 11명, 예산 3억)
- ◆ 부울경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및 부울경 국비확보 공동대응단 운영
- ◆ 부울경 경제동맹 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등 컨설팅을 통한 평가 및 환류

□ 2024년 추진전략

- ◆ 바이오융복합 산업 거점화 (바이오 혁신인프라 구축, 중앙부처 공모 대응)
- ◆ 특수목적용 모빌리티 기반구축 및 탄소복합소재 다변화 (국가예산 확보)
- ◆ 동서내륙 SOC (공정률 75%, 고용창출 8,970명, 무주~성주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핵심과제 추진계획
<p>바이오 융복합 산업 거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권 수출전략 핵심소재 개발 및 해외시장 맞춤형 사업화 지원 : 바이오 혁신기관 인프라 및 특화 핵심소재를 활용한 기업 전주기 지원 ▪ 핵심소재-메카노메디슨 위탁개발 및 실증 기반구축 : 핵심소재-메카노메디슨 신속 개발공정 플랫폼 구축 및 실증·동물실험 대체 유효성 평가센터 구축
<p>특수목적용 모빌리티 기반구축 및 탄소복합소재 다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한환경용 필드로봇 기반 구축 : 극한환경용 필드로봇 상용화 전주기 기업지원 및 통합 실증·검증 인프라 구축, 국가예산 확보 ▪ 석유/석탄계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밸류체인 확보사업 : 부산물 가공 및 업사이클링, 고탄성 핏치계 탄소섬유 제조, 복합소재 제조 기술개발
<p>동서내륙 SOC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새만금(진봉)~김제~전주~완주 고속도로 구축 ▪ 전주~대구 고속도로 : 무주~성주구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 2024년 초광역 협력 계획

-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각 과제별 사업단 구성·운영
 - 글로벌 의료헬스케어뷰티산업육성 클러스터조성 사업단, 호남권 헬스케어 산업화 통합기술지원사업단 등 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단
 - 초광역협력지자체 및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예산 확보 활동

□ 2024년 추진전략

- ◆ 미래산업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초광역경제권 구축 (고용 430명, 매출 787억원, 사업체 70)
-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융복합 관광허브 구축 (생활인구 확대 80만명)
- ◆ 순환경제 혁신을 위한 교통망 확대·거점간 네트워크 강화 (도로, 철도연장 74.6km)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핵심과제 추진계획
미래산업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초광역경제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 초광역 그린수소 경제권 실현 : 액화수소 저장·운송·충전용 기기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천연물바이오 협력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고도화 : 천연물 의약소재 광역협력지원센터 조성 및 상용화 지원, 동해안 해안천연물 바이오 벨트 조성 사업 ▪ 디지털헬스케어 첨단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 제론테크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융복합 관광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호축 중심 백두대간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내륙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권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캠핑장 조성 등 ▪ 동해안권 협력을 통한 체류형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안권 생활관광 기반구축, 환동해권 연계 철도망 구축
순환 경제 혁신을 위한 교통망 확대·거점간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적기 완공, 용문~홍천 철도 구축

□ 2024년 초광역 협력 계획

- ◆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전북특별자치도와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예산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와 천연물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예산 확보
 - 경상북도와 동해안권 발전위한 협력 체계 구축

□ 2024년 추진전략

- ◆ 특화생물자원 활용 초광역협력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시장 확산 (생산액 3,136억원)
- ◆ 데이터 기반 SW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 (기업지원 6건)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핵심과제 추진계획
초광역권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 특화생물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포공장 활용 특화생물자원 산업화 혁신기반 구축사업 - 초광역권협력 바이오클러스터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제주 SW융합클러스터2.0(특화산업강화) 사업

□ 2024년 초광역 협력 계획

- ◆ (초광역권 산업 육성)
 - (강원) 지역의 농·임·수·축산업의 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 분야의 고도화된 산업으로 연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전남) 제주자원 활용 신산업 육성 정책과 전남 바이오밸리 연계를 통한 원료소재 공급-대량생산 체계 구축
 - (충북) 바이오 소재 인증·평가센터 등 혁신자원 연계를 통한 초광역 전략산업 발전
- ◆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
 - 주관 지자체(대구-제주), 사업전담기관(NIPA) 및 수행기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간 협약 추진 및 사업 공동 수행